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 만수무강 하세요 ” ...450년 전통 ‘ 강릉 도배레 ’ 3년 만에 개.	1
강원도민일보		위촌리 도배레 무형문화재 등재 작업 본격화	2
江原日報		[속보]440년 전통의 위촌리 도배레 3년만에 재개[1/3]	3
江原日報		[속보]440년 전통의 위촌리 도배레 3년만에 재개[2/3]	4
江原日報		[속보]440년 전통의 위촌리 도배레 3년만에 재개[3/3]	5
강원도민일보		양구군 올해 읍면별 주요 현안 다각적 부각 ‘ 눈길 ’ [1/4]	6
강원도민일보		양구군 올해 읍면별 주요 현안 다각적 부각 ‘ 눈길 ’ [2/4]	7
강원도민일보		양구군 올해 읍면별 주요 현안 다각적 부각 ‘ 눈길 ’ [3/4]	8
강원도민일보		양구군 올해 읍면별 주요 현안 다각적 부각 ‘ 눈길 ’ [4/4]	9
글로벌뉴스		횡성군 산림조합, 제61기 정기총회 개최	10
ms투데이		강원도, ‘ 특별자치도 ’ 맞춤 신규 캐릭터 개발? ‘ 범이&곰이 ’	11
ms투데이		강원도, ‘ 특별자치도 ’ 맞춤 신규 캐릭터 개발? ‘ 범이&곰이 ’	12
신아일보		[독자투고] 제설 사각지대, 보행자 중심의 대책 마련 필요	13
江原日報		박기영 강원도의원 "관공서 청사 주변 제설작업 적극 나서...	14
충청MBC		빙판길 보행자 부상 해마다 늘어.. "제설 대책 시급"	14
江原日報		인제군재향군인회 제62차 정기총회 기념행사 개최	15
강원도민일보		동서6축 마지막 퍼즐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시급[...	16
강원도민일보		동서6축 마지막 퍼즐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시급[...	17
강원도민일보		동서6축 마지막 퍼즐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시급[...	18
퍼스트뉴스		한국노총 소방노조, 박정하 국회의원에게 소방공무원 출동 ...	19
江原日報	02면	카지노업 허가 권한 이양 · 도의원 정수 자율 부여	20
강원도민일보	01면	18개 시 · 군 요구 상이 전체 특례 적용 한계	21
亞洲經濟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관련 간담회 열려	22
G1방송		강원도청사 신축이전 '시동'	23
江原日報	12면	도청 2청사 7월 운영에 강릉지역 환호	24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강릉 2청사 개청, 본청 실국 감축 불가피	24
부산파이낸		스쿨존 2곳 제한속도 시속 50km...강원도 시범 운영	25

강원도민일보	04면	화천산천어축제 100만명 돌파 '자원봉사 힘' 빛났다	26
강원도민일보	15면	추위 잇는 화천산천어축제 '밤에 더 후끈'	26
수산인신문		강원도, '대서양 연어 국산화' 시동	27
江原日報	07면	‘ 한우 값 급락 ’ 사육농 폐업 우려 현실화	27
강원도민일보		2022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강원도 보통	28
		강원도 산업재해로 34명 숨져.. 전국 8번째	28
		강원 교통지도의 미래... ‘ 교통오지 탈피 ’	29
강원도민일보	01면	-30도 냉동고, 한파 절정	30
강원도민일보	05면	상수도 터져 건물 전체 뽕뽕... 동장군 매서운 기세	30
강원도민일보	15면	철원군 강추위 잇단 상수도 동파 긴급 출동	31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밀리언 화천산천어축제 끝까지 안전하게	32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강원도를 전지훈련 거점으로	33
江原日報	18면	[The 초점] 특별한 강원도의 길, 교육	34
江原日報	19면	[사설] 정치권, 경제 시름 ‘ 설 민심 ’ 가슴으로 귀 기울여야	35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지역

“만수무강 하세요”...450년 전통 ‘강릉 도배례’ 3년 만에 개최

이연제

위촌리 마을 합동세배 전통 계승
권성동 의원 등 주민 100여명 참석
김정기 부촌장 작사 아리랑 공개



▲ 45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도배례가 지난 23일 위촌리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위촌리 도배문화로 꽃을 피우니 아리랑을 불러서 흥겨워진다’, ‘멍에재 내룻에 위촌천 흘러 제일 강릉을 이루었네’

주민들이 마을의 최고령 연장자를 모시고 세배를 올리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450여년 전통의 도배례가 계묘년(검은토끼)새해를 맞아 성황리 개최됐다. 위촌리 주민들은 설 이튿날인 지난 23일 마을 내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최고령 연장자인 최종춘(97) 촌장과 김정기(94) 부촌장, 심창식(89) 아촌장을 모시고 합동 도배례(都拜禮)를 올렸다.

이날 도배례에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심오섭·박호균 도의원, 김용남 시의원 등을 비롯해 위촌리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촌리는 조선 중기인 1571년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지금까지 촌장을 모시고, 합동 세배를 올리는 전통을 계승해왔다. 올해 도배례는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다가 3년만에 재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기 부촌장이 직접 작사한 위촌리 아리랑이 처음 공개됐다. 주민들은 이날 아침 도포와 두루마기, 갓 등의 전통 의복을 갖춰 입고 삼삼오오 전통문화전승관으로 모였다. 주민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최종춘 촌장은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올해도 내내 평안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석봉 위촌리 대동계 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도배례가 이어져 너무 감격스럽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협조해준 모든분들께 감사하다”며 “향후 위촌리 도배례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 등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지역

위촌리 도배례 무형문화재 등재 작업 본격화

이연제

시에 예산 반영 요청

450년 전통의 강릉 위촌리 ‘도배례(都拜禮)’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24일 위촌리 대동계(회장 이석봉)에 따르면 올해 도배례 행사에서 김정기 부촌장이 직접 작성한 ‘위촌리 아리랑’을 처음 공개하고, 강릉시에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위촌리 도배례의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위촌리 대동계를 설립하고, 도배례 시초년을 을곡 이이선생의 1571년 서원규약 기준으로 확정지었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올해 위촌리 도배례 무형문화재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 용역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도배례 행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과 권혁열 도의장은 “450년 전통의 강릉 위촌리 도배례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봉 회장은 “수 년전 마을 법인을 설립하고, 시초년을 확정짓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자료 확보와 각종 심사 등 문화재 등록까지 2~3년은 걸리겠지만, 도배례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무탈히 보존·전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dusdn2566@kado.net

[속보] 440년 전통의 위촌리 도배레 3년 만에 재개

최종춘 촌장 건강하시라 새해 덕담

23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레'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23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레'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되면서 전통을 이어갔다.

23일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촌리 도배레'가 열렸다.



23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레'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년 01월 23일 (월)
사회

이 마을 합동 도배례는 설 다음 다음날 주민과 출향인사들이 도포와 두루마기, 갓 등 전통복장으로 최고령 연장자인 최종춘(97) 촌장과 김정기(94) 부촌장, 심창식(89) 아촌장을 모시고 합동으로 새배를 올리고, 주민들끼리 서로 맞새배를 한뒤 만수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배례(都拜禮)를 진행한다.



23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례'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최종춘 촌장은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올해도 내내 평안하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주민과 참석자들에게 건넸다.



23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례'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사)위촌리 대동계는 '위촌리 도배례'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모임에서 마을 원로들과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배례의 시초년이 1571년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3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례'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마을의 큰 어른인 촌장은 마을 주민들께 덕담을 전하고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안녕을 기원한다. 위촌리 합동 도배 행사는 과거 촌장 집 마당에서 열렸으나 10여 년 전 전승관을 짓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석봉 위촌리 대동계 회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했지만 이번에 도배례 행사를 진행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강릉지역의 아름다운 전통인 도배례를 지속적으로 전승·보전해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전승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넘는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례'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한편 위촌리 도배례는 매년 설 명절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마을 행사다. 마을 단위의 합동 세배인 도배(都拜)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버이를 효성으로 받드는 경로효친 사상이 담겨 있는 강릉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3일 (월)

지역

양구군 올해 읍면별 주요 현안 다각적 부각 '눈길'

이동명

양구지역 올해 지역별 주요 현안으로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 개선(해안면) △공무원 관외 유출 방지책 마련(양구읍) △직연폭포 관광명소화를 위한 장평보 철거(방산면) △심곡사 복원을 위해 양구군-조계종 업무협약 추진(동면)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발전계획 마련(국토정중앙면) 등의 사항이 부각됐다. 2023년 양구군 주민설명회가 최근 5개 읍·면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박귀남 군의장과 김선목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읍·면 업무보고와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 등이 진행됐다.



▲ 2023년 해안면 주민설명회가 최근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안면 설명회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이후 캠프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철회방안 등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과 해안면의 주차시설 대부분이 마을 또는 건물 뒤에 위치해 행사 시 혼잡하므로 도로 주변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통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오유1리 토사장 주변에 방치돼 있는 감자창고의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들 요청에 대해 군수는 현장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사과, 시래기 등 농산물의 생물관매에는 한계가 있어 농식품가공사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판로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해안면 주민대표는 해안면 내 양구군 예산투입으로 조성된 시설(시래기창고, 사과선별장 등)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소유주와 별개로 해안면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규정 완화 방안 모색 △외국인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안 검토 △수년전 양구군 사업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다 중간 도피로 근로자보험료를 고용 농가주가 부담했는데 지원방안 검토 등의 요구가 나왔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3일 (월)
지역



▲ 2023년 양구군 방산면 주민설명회가 최근 방산면복지회관에서 서흥원 군수, 박귀남 군의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산면 설명회

주민대표 A씨가 “부녀회장들이 각종 행사에 노고가 많으므로 이장처럼 매월 수당지급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자, 군 관계자는 “의견에 적극공감하나 상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어 방산지역에는 스포츠시설이 거의 없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군부대 유휴지 등을 활용한 스포츠 시설 설립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65여단 전투지원 중대에 야구장 지원계획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조례에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는 답변이 이뤄졌다. 상무룡도로가 급커브라서 위험해 직선으로 다리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과 한길 화장품 제조사 유치 시 꿀을 연계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구 등이 있었다. 신철우 군의원은 “직언폭포 상류에 있는 장평보가 폭포기능을 변화시킨다”며 “장평보는 금악리까지 용수로가 연결돼 있고 외관상 좋지 않은데다 개보수비용도 많이 소요드므로 직언폭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장평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직언폭포 밑 발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2023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주민설명회가 최근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에서 서흥원 군수, 박귀남 군의장과 군의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토정중앙면 설명회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3일 (월)
지역

도촌리 발전계획·방안 마련을 해달라는 주민대표의 요청에 군수와 양구군 관계자는 “천문대~봉화산 트레킹코스를 개발중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댐주변 마을지원 해당 마을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조례개정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창리양돈단지 악취문제 해결 방안 요구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군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도출됐다. 야촌리~용하리 교량으로 설치 요청에는 용하리~야촌리 구간 850m 중 210m구간만 교량화가 안 돼 있는데 이 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해서는 126억원이 필요해 자원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구암리에 주둔한 군부대(구암리 3대대) 범위가 넓어지면서 마을 진입로가 좁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년전 국방부에 건의해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추후 구암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혐오시설인 양돈단지 퇴비장을 군에서 매입해 마을사업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 2023년 양구군 동면 주민설명회가 최근 동면 복지회관에서 서흥원 군수, 박귀남 군의장과 군의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면 설명회

△원당리 소나무길~양구수목원 연결로 소나무길 조성 △팔랑폭포 위 미활용 다리 철거 △덕곡교 다리 공사와 연계해 대암중~덕곡교(군도7호선) 도로 밑 대형수로관 보수 등의 요청이 나왔다. 또 지방도 453호선~산양중식장 도로에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실제 현황은 도로이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곳으로 '도로'로 지목변경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언도 도출됐다. 곰취축제를 예전처럼 팔랑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군수는 “양구군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접근성, 축제장, 주차부지를 고려했을때 동면에서 개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곡사 복원이 가능하도록 군이 조계종 관계자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해달라는 주민대표의 요청에 군 관계자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3일 (월)

지역



▲ 2023년 양구군 양구읍 주민설명회가 최근 양구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서흥원 군수, 박귀남 군의장과 군의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구읍 설명회

지역 기관단체장이 양구를 살린다면서 군인은 왜 유출시켰는지 묻고 공무원 관외 유출도 문제라는 지적을 하자 군수는 군인 유출은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것이고 공무원 관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반영 등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명산 등산객이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해 등산하고, 추곡리 방향으로 하산해 웅진리 마을에 실익이 없는 바, 마을주민이 등산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등 주민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하천변을 따라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자 군수는 현장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수근마을리는 넓은 마을임에도 희망택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너분동쪽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는 지적과 수년전 조성된 예풍경갤러리 시설물이 조성 당시 상태로 방치돼 마을미관등을 해치고 있으니 시설개선과 조성 목적대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밖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소금 제설' 효과가 낮아 눈이 오래도록 녹지 않고 쌓여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를 아스콘포장(덧씌우기)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동명 ldm@kado.net

ldm@kado.net

글로벌뉴스통신

2023년 01월 21일 (토)
사회

횡성군 산림조합, 제61기 정기총회 개최

이병완 기자



(사진제공 : 횡성군 산림조합) 횡성군 산림조합 양재관 조합장, 제61기 정기총회 결산 보고서 심의 진행

[횡성=글로벌뉴스통신] 횡성군 산림조합(조합장 양재관)은 2023년 1월20일(금) 오후4시 30분 횡성군 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양재관 조합장, 김명기 군수, 한창수 도의원,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이사, 감사, 대의원, 산림조합 상무 및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61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기총회는 제1부 행사로 개회,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양재관 조합장 내빈소개 및 인사, 김명기 군수 축사, 한창수 도의원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횡성군 산림조합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홍보, 관심으로 크게 기여한 공으로 이병완 산림조합 대의원과 김병혁 횡성군청 산림녹지과장이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제2부 행사는 제61기 정기총회 개회선언, 자체감사 결과보고, 제161회 임시총회 회의록 낭독, 부의사항 으로 조합 비상임감사 선출(안)과 2022년 결산(안) 및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안)를 심의 하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횡성군 산림조합은 2022년 제61기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823,115천원 으로 전년도 대비 274,839천원 증가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양재관 조합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산림조합 이사, 감사, 대의원, 조합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맞춤 신규 캐릭터 개발? ‘범이&곰이’는?

진광찬 기자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때 공개
범이&곰이 유지 방침? 활용 미정
상품화 전면 중단·대외 사용 자제
팬클럽 “도가 스스로 길 막아서”



강원도는 최근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범이&곰이'와 함께 사용할 특별자치도 맞춤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마스코트 ‘범이&곰이’ 퇴출 논란 의혹(본지 지난해 11월 25일자 보도)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신규 공식 캐릭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도는 지난해 11월 신규 캐릭터 명칭공모를 마치고, 강원디자인진흥원과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통해 신규 캐릭터 대상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캐릭터 디자인 시안을 작업하는 단계다.

도가 설명한 신규 캐릭터 개발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치와 스토리 등을 담은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다.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신규 캐릭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강원도 마스코트인 범이&곰이는 신규 캐릭터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장하는 저작권·부정경쟁행위 등 법률적 침해 여부를 고려해 현재 범이&곰이 사용은 지양하고 있다.

올해부터 범이&곰이 관련 상품화(계약 기간이 남은 기업 제외)를 종료했다. 또 대외적인 활용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오는 6월 이후 범이&곰이 활용방안은 아직 고민 중이다.

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범이&곰이에 대한 상표권을 도에서 소유하고는 있지만, IOC가 국제소송을 고려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일단은 IOC에 오는 6월 캐릭터 개발 전까지 범이&곰이 사용의 양해를 구하는 등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캐릭터 관련 부서인 대변인실을 소관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5)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IOC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식 조치로 보인다”며 “기념물과 비슷하게 범이&곰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강원도 캐릭터 범이&곰이가 2021년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도 SNS 이벤트를 독려하는 모습. (사진=범이곰이팬계정 SNS 갈무리)

범이&곰이 팬클럽 회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범이&곰이 커뮤니티 팬클럽 관리자 A씨는 “지난해 초까지는 도에서 법률 자문 등을 근거로 저작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강원도가 스스로 길을 막아선 느낌”이라며 “현재 아무런 소식 없이 범이&곰이 공식 SNS 게시물도 끊겼다. 정치적인 이슈까지 끼긴 했지만,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는 새 캐릭터 관련 사업비로 올해 1억6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범이&곰이 홍보 사무관리비는 전액 삭감했다.

범이&곰이 퇴출 논란은 지난해 11월 도가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자 일부 도민들이 반대 운동 등 반발에 나서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전·현 강원도정 공방으로 번지며 정치권에까지 옮겨붙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IOC에서 지난해 공문을 보냈고, 구두로 말한 것까지 총 세 번이나 사용 중단을 통보했다”며 “쓰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 2세 설정으로 개발된 범이&곰이의 상호 유사성을 들며 법률적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신아일보

2023년 01월 21일 (토)
오피니언

[독자투고] 제설 사각지대, 보행자 중심의 대책 마련 필요

신아일보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의원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의원

눈이 잦은 겨울철, 인도·이면도로, 관공서 주변의 인도·부지, 경사로 구간 등 제설작업이 미흡한 '제설 사각지대'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행자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박기영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8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제설작업에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주택·상가 주변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강조하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들은 청사 내 출입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청사 주변의 인도·부지는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두꺼운 빙판길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공서들은 설령 청사 주변의 인도·부지 등이 건축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결빙에 취약한 경사로 구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습적인 폭설에도 선제적 예방·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 제설시스템 구축 및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 실효성 있는 제설·제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폭설 이후에는 인도나 이면도로에서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염려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는 주민의 보호”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술선수범하여야 할 관공서들이 청사 주변 제설작업에 소홀한 것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관공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의원

master@shinailbo.co.kr

江原日報

2023년 01월 24일 (화)
정치

박기영 강원도의원 "관공서 청사 주변 제설작업 적극 나서야"

최근 3년 강원도내 빙판길 부상사고 총 131건
주민 사고예방 위해 청사 주변 인도 제설 필요

강원도의회 박기영(국민의힘.춘천) 안전건설위원장이 도내 관공서가 청사내뿐만 아니라 인근 인도 및 부지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근거를 들면서 박 위원장은 "관공서들이 청사 내 출입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청사 주변 인도, 부지의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두꺼운 빙판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공서들은 청사 주변의 인도·부지 등이 건축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춘천MBC

2023년 01월 23일 (월)
강원

빙판길 보행자 부상 해마다 늘어.. "제설 대책 시급"

강원도에서 빙판길 보행자 부상 사고가

해마다 늘어, 인도 제설 대책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의회 박기영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건이던 빙판길 사고는

2021년에 38건, 2022년에는

83건으로 느는 등

최근 3년 동안 131건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은 낙상 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공서마다 청사는 물론

주변 인도와 부지에 쌓인 눈도 제거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江原日報

2023년 01월 24일 (화)
사회

인제군재향군인회 제62차 정기총회 기념행사 개최



인제군재향군인회(회장:정주학)는 지난 20일 인제문화원에서 임원 및 회원들과 지역 보훈단체장을 비롯해 남평우 전 향군회장, 배상요 인제부군수, 이춘만 인제군의장, 엄윤순 도의원, 김도형.김재규.신동성.황현희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정기총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인제 인제군재향군인회가 새해에도 안보와 애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제군재향군인회는 지난 20일 인제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제62차 정기총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 및 회원들과 지역 보훈단체장을 비롯해 남평우 전 향군회장, 배상요 인제부군수, 이춘만 인제군의장, 엄윤순 도의원, 김도형.김재규.신동성.황현희 군의원, 함장길 NH농협인제군지부장, 이만철 인제문화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주학 회장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올해도 다양한 안보행사를 통해 애국심을 배양 시키고 군민과 함께하는 향군과 하나 된 안보의 역군이 되겠다 고 말했다.

이춘만 의장은 축사를 통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2일 (일)

정치

동서6축 마지막 퍼즐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시급

박지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맞아 '육지 속의 섬', 폐광지역 교통망 확충 시급
동서 6축 고속도로 마지막 퍼즐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중
폐광지역 교통망 확충돼야 제대로 된 대체산업 육성 가능

2023년 새해, 강원 남부지역 숙원 SOC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폐광지역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육지 속의 섬'처럼 고립된 상태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까지 겪는 등 지역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쇠퇴 이후 제대로 된 대체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것은 교통망이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폐광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앞당겨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정안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불모지' 폐광지역 접근망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영월~삼척 구간 조기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 및 과제를 알아본다.

영월~삼척 미개통 구간



▲ 동서6축 고속도로 마지막 잔여구간인 영월~삼척 미개통 구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2일 (일)

정치

■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 어디까지 왔나

동서6축인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248.5km)는 1997년 착공해 18년 만인 2015년 평택~제천(127.3km) 구간이 개통됐다. 이후 제천~영월 고속도로(29km)는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오는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서6축 고속도로 잔여구간인 제천~영월~삼척 구간(121.3km)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다

동서6축 고속도로 추진은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SOC 조기 확충을 위한 강원도와 충북, 경기 등 각 지자체 주민의 열망이 결집되면서 국가 차원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는 영월~삼척 구간 개통을 위한 여론 결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앞서 2010년 12월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이 반영됐고, 2011년 6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담겼다.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 강원과 충북 7개 시군이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한데 이어 2015년 1월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발족됐다. 현재, 경기와 충북, 강원 등 12개 시군이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평택~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은 2019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여론이 밑바탕이 되면서 2020년 8월,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이어 강원 남부권 숙원사업인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잔여구간인 영월~삼척(91.0km)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최종 심의의결됐다. 동서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영월~삼척 구간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제성 저하 등이 지적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 거쳐야 할 관문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회장 태백시)는 2022년 12월 23일 오투리조트 백두홀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제8차 정기회를 열고 미개통 구간인 제천~삼척 구간 조기 개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정책적 논리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강원 남부지역 숙원 SOC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선 폐광 지역 SOC를 벗어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근대 산업과 문화 유산지역으로의 정책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도 동서6축 물류통로 연결을 통한 국가무역 경쟁력 제고와 강원도와 내륙권 통행시간 단축, 9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2일 (일)

정치

강원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이 발표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하자!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정책특독 보고서에 따르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이 시행된지 벌써 28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지역쇠퇴의 이미지인 ‘폐광지역’이라는 단어도 강원 남부지역의 별명처럼 고착화 되고 있다”며 “이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근대 산업과 문화 유산지역으로의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 완료 시 동해안의 동해·삼척항과 서해항의 평택항을 최단 시간으로 연결해 강원도내 시·군 간 및 타 광역자치체와의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동해·삼척시 기준 시에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경기 일부지역 최대 50분 단축을 포함해 도내 시·군들 간의 통행시간 감소 역시 현재보다 평균 30분 단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9조16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7070억원 △고용유발효과 7만5100명 등으로 추산됐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영월~삼척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폐광지역이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새로운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해 정책적 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 폐광지역 접근망 개선 대토론회가 2022년 12월 21일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종훈 삼척부시장, 문관현·김길수 도의원과 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 2023년 하반기 예타대상사업 선정 집중 및 국가적 차원 사업 추진 논거 마련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선 앞서 2020년, 제천~영월 구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반영 통과 사례처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사업추진이라는 논거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된 영월~삼척구간(91.0km)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작업에 대한 집중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 총 사업비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노선 구간을 끊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삼척에서 제천방향으로 동시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높이는 방향을 같이 고려해 정책적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현재 운행 중인 동서6축 고속도로 대소~제천 구간의 최근 4년(2018~2021년)간 교통량 변화추이를 보면, 연평균 5.4%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주~제천 구간의 중대형 화물차량이 증가(연평균 25.7% 증가)해 화물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미연결 구간인 영월~삼척도 벌크화물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향후 타당성 조사 시 화물수요 증가 부분을 반영해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퍼스트뉴스

2023년 01월 21일 (토)
사회

한국노총 소방노조, 박정하 국회의원에게 소방 공무원 출동 간식비 등 예산 현실화 요구 정책 간담회 개최

박학송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현장 소방공무원 어려움 대안 모색

[퍼스트뉴스=박학송 기자]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원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박정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후 소방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를 박정하 의원님 지역구인 원주에서 갖게되어 매우 뜻깊다. 소방심신수련원 추가건립, 1997년부터 3,000원으로 동결된 출동간식비 등 소방 수당의 현실화, 소방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공식인 소방청장 자리의 정상화 등 직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강원도의회 김기홍 부의장에게 ‘원주 태장119안전센터 신축’을 건의하였다.

박정하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과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뜻을 함께하겠다”며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심신수련원 추가건립은 확정된 강원도 심신수련원 외에 권역별로 4군데를 계획 중이다” 전국 각지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수련원이 건설되어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또한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오래도록 동결되어온 각종 수당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3년 01월 25일 (수)

종합 02면

카지노업 허가 권한 이양·도의원 정수 자율 부여

새로운 미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례조항 분석

(하·完)소멸위기지역 신산업 육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 등 국내 대표적인 소멸위기지역의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분권에 기반한 지역소멸 대응의 ‘쇼케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치조직권과 자율재정, 감사 등의 예외조항 등 고도의 행·재정 특례가 전제돼야 한다.

■**균형발전**=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는 카지노업의 허가, 변경 허가, 신고, 규제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한다. 강원랜드의 매출액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광업사무 시·군 위임안 검토
자치조직권 등 의장에 이양

계획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된 석탄경석에 광물의 지위를 부여해 세라믹 등 신산업에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채굴계획인사, 조광권 등 광업사무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받아 시·군에 위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 광산 중 28%가 강원에 집중돼 있다. 안전상 비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강원지역 읍·면·동 29곳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어 판매 기준

을 다소 완화하는 특례도 추진된다.

■**행·재정 특례**=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방안을 종합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며 도지사에게도 통보한다. 현재 2명의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직속기관 등의 설치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고 국가공무원은 부지사 1명으로 제한한다. 이는 강릉에 부지사급 2청사 설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한다. 개정안 통과 시 현재 도의원이 1명뿐인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은 지역구 도의원이 2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 등 자치조직권은 의장에게 이양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종합 01면

18개 시·군 요구 상이 전체 특례 적용 한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가 본격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비전은 우여곡절 끝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확정됐으나 강원도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담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및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각 부문을 분석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시리즈를 신는다.

1. 갈 길 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관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의 명확성이다. 강원도의 경우 제주도와는 달리 광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간 경쟁과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농·산림지역과 동해안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이하다.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강원도는 시군으로부터 제기된 규제 개선 중 핵심내용을 개정안의 181개 조문에 모두 담았다. 환경·산림·국방·농지 4대 핵심규제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시군별 요구를 총망라하다 보니 과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총괄하고 있는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자치도 출범 전까지 국회에서 한번 정도 법 개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한번에 끝내는

시·군 제기 안 181개 조문 담아

법 개정 시 국회 설득 여부 관전

제주·세종과 달리 비전 불명확

미래산업 관련 목표 구체화 시급

'원샷 원킬' 식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2차 개정안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의원 발의로 진행,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2006년)의 '국제 자유 도시', 세종특별자치시(2012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강원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평화와 분권과 같은 의제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도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산업목표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17개 광역지자체는 '5극 3특'으로 재편된다. 강원도에 이어 전북도(2024년 1월 18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17개 시·도는 5개 메가시티(수도권·부울경·대경권·광주전남권·충청권)와 비(非)메가시티인 3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전북)로 구분, 지역별 육성방안이 차별화된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무관하게 시도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은 pje@kado.net

亞洲經濟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관련 간담회 열려

(강릉)강대웅 기자

강릉시의회 · 강릉시민연대 · 동해안권 도시발전연구원 교수 등 참석



[사진=강릉시의회]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신설 소식에 지역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릉시의회와 강릉사랑시민연대는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릉사랑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간담회는 오는 26일 10시 강릉시의회 3층 시민사랑방에서 진행되며 강릉시의회 의장단과 시민연대 동해안권 도시발전연구원 교수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29일 국회에서 628년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 이어 3번째 강원특별자치도로 법적 지위를 얻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강릉시민연대 기세남 대표는 "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 특별법에 따른 행정 체제, 재정, 인사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규제로 묶여 개발에 제한받던 분야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대표는 "사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강릉지역에 도움이 되는 강원도 제2청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영동권 도시발전연구원장 박홍식교수는 "제2청사가 강릉으로 옮겨 올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부지선정, 조직 문제,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참여하는 교수들도 "강릉시민을 대표하는 강릉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역별 특성을 살려 동해안 권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9일 강릉 스카이에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서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오는 7월1일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어떤 조직과 기구를 배치할 것에 대해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는 2개국 규모의 조직으로 개편해 강릉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강대웅 dwkang@ajuneconomy.com

강원도청사 신축이전 '시동'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앵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에 오신 분들을 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강원도가 새해 시작부터 특별자치도 청사가 될 신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올해로 춘천 봉의산 자락에 자리잡은지 66년이 된 강원도청.

건물이 낡은데다 부지가 좁아 주차공간 역시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 불편이 컸습니다.

◀브릿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가 추진해 온 청사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청 신청사 부지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확정 후, 최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신청사를 고은리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고,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법 예산쟁점 파악 등 틀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12월 초순까지로, 용역비 4억 3,7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신청사는 10만㎡ 규모로 2026년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은 토지 보상비를 포함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업비는 연간 최소 600억 원씩 적립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인근 30만㎡는 공공기관 부지로, 60만㎡는 상업·업무·미디어 지구로 함께 개발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행정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도정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청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은리 일대 118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2023년 01월 25일 (수)
지역 12면

江原日報

도청 2청사 7월 운영에 강릉지역 환호

김진태 지사 본격 운영 발표 이전 부서 규모 등 축하
시 “이전 가시화된 만큼 동해안 시군과 빠른 정착 협력”

【강릉】속보=김진태 도지사가 올 7월1일부터 강원도청 2청사를 본격 운영(본보 지난 20일자 1면 보도)하겠다고 발표하자 강릉지역사회가 환호하고 있다.

지난 19일 강릉에서 열린 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제2청사를 빨리 움직여 달라는 영동권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올 7월부터 강릉 2청사 근무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제2청사 건립에 앞서 임시청

사 이전부터 가시화되자 지역 주민들은 도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과 관계 없이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최종봉 강릉시번영회장은 “2청사 설치가 지사 공약이긴 했으나 건물 신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던 차에 올 하반기 임시청사부터 이전시키겠다는 발표를 해 줘고 무적”이라고 했다. 또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도내 빅3 도시 인구는 약 25만명 수준으로 비

슷했으나 28년이 지난 지금 영서권과 영동권의 인구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제2청사가 침체된 영동지역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제2청사가 이전하면 영동지역, 특히 태백·정선을 포함한 남부권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할 때 하루를 다소도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영동·영서 간 직원 및 정보 교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아직 본청사 위치 선정은 물론 이전 부서 규모, 임시청사 위치 등이 전혀 정해진 바 없다. 도는 곧 임시

제2청사를 가건물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권 주민들은 기존 환동해본부 기능 외에 지역 특화 분야인 문화관광국, 해상무역 등 지역 발전에 전기가 될 산업국, 오색케이블카와 정선가리왕산 등의 현안을 다룰 산림환경국 등의 이전을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청 제2청사 이전이 가시화된 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동해안 시·군과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종합 03면

도 강릉 2청사 개청, 본청 실국 감축 불가피

본청 1개국·환동해본부 이전 계획

본청 2개국·사업소 이전 병행 검토

속보=김진태 도지사가강릉제2청사7월 개청을 공식화(1월 20일자 4면 등)하면서 강원도 본청 실국감축 등 조직개편이 본격화된다. 2청사에는 해양수산국(가칭) 등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릉 제2청사는 김 지사의 영동권 핵심 공약으로, 도는 부지사급(1급)이 관장하는 2청사 신설에 앞서 2급 이사관이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2청사 개청을 위한 본청 조직개편 준비 작업이 시작되면서 도는 행정안전부와 지역본부 출범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규정에 맞춘 조직개편안 마련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역본부 출범을 위해 현

행 규정에 따른 실·국·본부 수를 맞추는 것을 주문했다. 최소 2개 실국 및 사업소 등 3개 실국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강원도가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기구수는 13개다.

이는 현행 본청 실·국수와 동일해 2청사 개청을 위해선 본청 실·국수감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도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청 1개국과 해양·수산 관련 사업소에 더해 출장소인 환동해본부를 2청사로 이전시키는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본청 2개국과 사업소를 이전시키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도는 본청 실국수는 최소 11개 이상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청사는 해양·수산, 해양관광, 수소 산업 등에 관한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

로 가닥이 잡혔다. 해양수산국(가칭) 등을 신설하고, 수산자원연구원·한해성수산자원센터·내수면자원센터 등 해양·수산관련 사업소를 통합·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7월 개청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3월 중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4월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2청사 개청을 위해선 본청 실국수의 일부 감축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본청 실국 규모 축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부산파이낸셜뉴스

2023년 01월 23일 (월)
사회

스쿨존 2곳 제한속도 시속 50km...강원도 시범 운영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춘천 봉의초교 앞 스쿨존을 찾아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점검했다. (사진=강원도)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 봉의초교와 강릉 남강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시속 50km로 상향조정된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시범사업'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2곳이다. 이곳에서는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일·공휴일에 최고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올라간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4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효과 분석을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정책을 제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7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도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춘천경찰서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봉의초교 앞 스쿨존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스쿨존 탄력 운영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 악영향을 주어진 안 된다"며 "스쿨존의 과도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설연휴인 지난 23일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오전 8시30분 개장과 동시에 얼음낚시터를 가득 채우고 있다.

화천산천어축제 100만명 돌파 '자원봉사 힘' 빛났다

지역단체·군장병 등 환경정화 활동
29일 폐막일까지 1500명 규모 전망

3년 만에 열린 2023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누적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사회단체와 군장병들의 자원봉사가 성공적인 축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제단법인 나라는 개막 17일 만인 지난 23일 누적 관광객은 106만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상고온과 겨울폭우로 정상 운영되지 못한 2020~2022년을 제외하면 14년간 '밀리언 페스티벌'의 명성을 되찾았다. 이

날 하루에만 13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화천을 찾아 설연휴 산천어축제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이처럼 밀리언 페스티벌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일 개막한 화천산천어축제에 모두 42개 봉사단체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담당하기로 한 날짜에 축제장에 나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화천에 주둔 중인 7사단, 15사단, 2군단 등 군부대 장병들도 축제장 곳곳의 교통 혼잡 지역에 배치돼 관광객들의 안전한 축제장 진입과 귀가를 돕고 있다.

더욱이 문화예술체육단체인 어울

림문화공연단, 야시매 우리소리, 게이트볼 군연합회, 군유해조수포획단까지 봉사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군장병을 포함해 연인원 954명의 자원봉사자가 축제장을 보살피고 있다. 29일 폐막일까지 자원봉사자 규모는 1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들이 화천산천어축제장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축제의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번 놀라고, 깨끗한 축제장에 두 번 놀란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에 대한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철

▶관련기사 15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지역 15면

추위 잇는 화천산천어축제 '밤에 더 후끈'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 북적
화려한 공연·거리 이벤트 눈길
설 연휴 지역상권 동반 활기

2023 화천산천어축제의 열기가 낮보다 밤에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설 연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화천읍 중앙로 선등거리에서는 '차없는 거리' 야간 페스티벌이 열려 수천명의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메인무대에서는 DJ와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거리 곳곳에 마련된



설 연휴 주말 선등거리에서 열린 야간 페스티벌에서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다채로운 이벤트는 가족들이 함께 연휴를 만끽하기 충분했다.

페스티벌 콘셉트인 '응답하라 선등거리'에 맞는 추억의 노래가 울리고, 친구와 연인들은 선등거리 한켠에 마련된 맥주시음을 비롯해 파크골프 체험, 신년운세 타로 체험, 산천어 낚시 이벤트 등을 체험하며 즐거움을 더했다.

거리 곳곳에는 나이트클럽이나 룩 카페 등에서 인기를 끌던 음악들이 실재없이 울려 퍼졌고, 선등거리의 화려한 불빛과 조명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을 설레게 했다.

원주에서 가족과 함께 선등거리를 찾은 고은희(9)양은 "낮에는 물고기를 잡고 썰매도 타고 재미있었는데

밤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풍선도 불어주고 놀아줬다"고 기뻐했다.

지역상권도 설 연휴 주말 밤늦게까지 활기를 띠었다. 거리 이벤트를 즐긴 관광객들은 음식점과 카페, 맥주집을 이용하며 설 연휴 분위기를 만끽했고 경품이벤트에 참가할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겼다.

화천군 관계자는 "수천여명이 3시간 동안 선등 거리에 모였지만, 관람객 밀집 방지를 위한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축제기간 야간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수산인신문

2023년 01월 22일 (일)

농수축산

강원도, '대서양 연어 국산화' 시동

담수 양식 통해 대량생산 기술 확보
해수 이동 후 'K-연어' 산업화 진행

강원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서양연어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도는 담수 양식으로 길러낸 어린 연어를 바다로 이동시켜 'K-연어' 생산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17일 "담수양식을 통해 성장한 어린 연어 2000마리(130g 내외)를 해수 양식 연구 추진을 위해 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고성 소재)로 이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린 연어는 2021년에 생물다양성법 개정 이후 국내에 처음 들어온 대서양연어 수정란(5만 개)을 약 1년간 담수에서 기른 것으로 최근에는 해수 이동을 위해 연어화 과정(smoltification)을 거친 '스몰트' 개체다. '스몰트'란 바다 이동 시기에 은백색으로 바뀌는 현상 또는 은백색으로 바뀐 어린 연어(체중 120g 내외)를 말한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이동한 어린 연어는 1주일간 해수 적응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인 성어(5~8kg) 생산 연구에 들어간다.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RAS)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성어 생산(5kg)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며, 대서양 연어를 우리나라 미래양식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그간 담수양식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정란 부화 특허기술 2건을 등록한 내수면 자원센터는 어린 연어(130g)의 대량생산 기술력(생존율 10%→90%)과 친환경 고밀도 양식 방법 등 내수면 연어 양식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술들을 개발했다.

최성균 강원도환경동해본부장은 "연어양식 산업은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 만큼 강원도 수산 연구 기관(내수면·해성) 간 협업을 통해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 연어의 국산화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江原日報

2023년 01월 25일 (수)

경제 07면

'한우 값 급락' 사육농 폐업 우려 현실화

통계청 지난해 4분기 가축동향
가격 하락에 출하 뚝 마릿수 증가
사료 값 급등·소비 위축 '이중고'

한우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강원도 내 한우 사육농가 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향후 한우 가격은 수요 위축으로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5만9,464마리로 전년 동분기(25만1,422마리) 대비 8,042마리(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큰 소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출하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연령 2세 이상 마릿수가 4.4%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강원도 내 한우 사육농가는 6,371곳으로 1년 전(6,602곳)보다 3.5%(231곳) 줄었다.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폐업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특히 도내 한우 2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같은 기간 3,224곳에서 2,931곳으로 9.1%(293곳) 급감해 영세 농가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한우용 배합사료 가격은 2022년 10월 기준 kg당 613원으로 전년(483원) 대비 26.9%나 상승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 수요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

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외식비 지출 심리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공급이 늘고 수요는 줄면서 한우 가격이 설 명절 이후인 2월, 3월엔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처럼 산지와 유통 한우 가격 차이가 커지자 전국한우협회와 한우 가격 하락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도·소매 가격을 연동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쇠고기 매출은 명절 전후에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한다"면서 "앞으로 생산비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높은 공급 부담 속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강동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3일 (월)

정치

2022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강원도 보통

남궁창성

2022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등급 가운데 강원도는 '보통'을 받았다.

반면 춘천시, 원주시,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00개 훈련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축소 실시했던 것을 2년 만에 정상적으로 재개해 실시했다.

평가는 국가재난대비훈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단 182명의 사전, 현장, 사후 평가 및 중앙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시·군·구 및 지방 공공기관은 시·도가 자체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강원도는 '보통'을 받았다. 춘천시를 비롯해 △원주시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은 '우수' 등급을, 이어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속초시는 '미흡'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기관과 개인은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계획 수립시 보완하도록 하고 특별 교육과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재난대비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춘천MBC

2023년 01월 23일 (월)

강원

강원도 산업재해로 34명 숨져.. 전국 8번째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산업재해로 34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일터에서는

3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4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사망자 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11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해

644명이 숨졌습니다.

이승연

강원 교통지도의 미래... '교통오지 탈피'

[앵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명절, 해마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원도의 열악한 교통 환경인데요,

이런 열악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부터 철도까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새로 그려질 강원도의 교통 지도, 고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 등 역사 5개가 들어섭니다.

이 철도는 동해선 제진-강릉 구간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강릉-삼척 구간 철도 고속화 사업까지 실현되면, 강원 북부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동해안 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됩니다.

강원 내륙의 철도망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도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용문-홍천, 원주-만종 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와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수립하면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양구-영월 고속도로는 길이만 136Km.

사업비는 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교통불모지인 접경지와 폐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택-제천 고속도로 영월 연장은 이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2031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삼척 연장 노선과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동/강원도 건설교통국장 :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소멸위기 극복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6월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강원도가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고순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종합 01면

-30도 냉동고, 한파 절정

최저기온 설악산 영하 27.7도 기록
동해안·태백·정선 강풍주의보까지

계묘년 첫 명절인 설 연휴 마지막날부터 '-30도'에 육박하는 최강한파가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절정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내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 -27.7도, 향로봉 -25.4도, 화천(상서) -21도, 양구(해안) -18.5도, 횡성(안흥) 17.5도, 평창(면운) -17.3도, 춘천(남산) -16.3도, 고성(현내) -13도, 속초 -12.5도 등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를 기

점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동해와 삼척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했으며 동해와 삼척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특히 동해안 6개 시·군과 태백, 정선, 산간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록적인 추위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한파 피해 대비를 위

해 총력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로 유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제설제 살포와 수도관 동파 등 신속한 조치를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번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24~-19도, 영동 -18~-13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7~-4도, 영동 -4~-1도로 예보됐다. 구본호

▶관련기사 5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사회 05면

상수도 터져 건물 전체 뽕뽕... 동장군 매서운 기세

철원 연립주택서 상수도 동파
항공 결항·노인 저체온증 발견
도 "취약계층 추가 대책 마련"

올 들어 가장 기록적인 추위가 강원도 전역을 덮치면서 한파 피해가 속출했다.

계묘년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영하 30도에 육박한 한파가 몰아친 도내 곳곳에서는 맹추위에 동파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철원 동송읍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연상수도가 터지면서 건물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자체와 경찰 등은 긴급하게 누수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안전 사고를 우려해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고드름을 제거했다.

지난 23일 원주 지정면 안창리 일원에서 수도관 동파가 발생, 간현관광

지 일원은 약 1시간 정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했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동파사고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동파 피해가 이어졌다. 하지만 수리업체들이 연휴기간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이도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그나마 문을 열었던 수리업체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렸다. 원주의 한 수리업체는 "연휴라 문을 닫았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라며 "일부는 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집들은 날씨가 너무 추워진 탓에 수도관이 뽕뽕 얼어붙어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매서운 추위에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발견돼 긴급 후송되는 일도 발생하면서 한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노인들에 대한 위험도 커

지고 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32분쯤 8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 주변을 수색한 끝에 인근 밭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A씨를 발견했고 당시 심각한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폭설에 강풍까지 악천후 날씨가 예고된 제주지역과 매서운 강풍에 추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양간 항공편도 이날 모두 결항됐다. 원주~제주행 진에어 항공편도 모두 운항을 멈추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막혔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와 각 지자체들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호·신재훈·지역종합

▶관련기사 15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지역 15면



최근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위치한 A연립주택에서 맹추위로 급수관이 동파돼 건물 외부가 결빙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원군 강추위 잇단 상수도 동파 긴급 출동

철원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노후화된 주택의 상수도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철원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동송읍 이평리의 A연립주택 4층 내부의 수도 급수관이 계속된 추위로 동파돼 연립 내·외부가 모두 결빙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상수도 시설팀과 경찰은 건물 내·외벽에 형성된 대형 고드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우려해 세입자 및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입문 강제 개방 후 누수를 복구하고 외부 고드름을 제거했다.

철원지역은 인구감소 등으로 다세대 주택 중 거주자가 없는 경우가 많

아 동파 사고 발생 시 아래층 및 옆 세대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군은 최근 지역내 급수공사 대행업체인 수도공무소 연합회와 긴급 지원반을 편성하고 해빙 장비를 확보하는 등 동파에 대비하고 있으며 철원읍과 갈말읍, 김화읍 등 3개 권역에 상수도 관리 부서와 주·야간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무소 2곳을 우선 지정했다.

또 동파 계량기 교체,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급수 배관 결빙 시 스팀 해빙기를 이용한 즉각 처리 등 동절기 상수도 관리 및 복구 대비 체계를 위한 대책반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재용 yjy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사설/칼럼 21면

밀리언 화천산천어축제 끝까지 안전하게

-얼음낚시터·위생·응급 등 안전품질 명성 지켜내야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설날 연휴 동안 100만명을 넘겼다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상 고온현상과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3년간 공백을 뚫고 그 명성 그대로 회복할지 눈길이 쏠린 가운데 1월 23일 오후 돌파함으로써 성공적인 재개를 알렸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유발하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비롯해 농산물 판매 및 고향기 부급제 등 연중 파급을 가져오는 무형적 효과까지 화천군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였습니다.

설 연휴가 끼었을 때 방문객이 급감하는 경향과 달리 이번엔 설날 하루에만 7만여명이 방문하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연휴기간 통틀어 무려 30만명이 찾으면서 화천 시내 전역이 북적거렸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얼음낚시장과 100여m 길이의 얼음썰매장이 들어선 화천천을 비롯해 실내얼음 조각광장 등 읍내 곳곳의 부대 행사장을 찾으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2003년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2006년부터 100만명 이상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일찌감치 몇년간의 공백을 무색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리면서 벌써부터 축제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설날 연휴에 가족여행 수요가 늘

어날 것으로 예측해 축제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화천에서 숙박하면 밤낚시, 평일 얼음낚시, 파크골프 공짜’라는 축제장 상공의 대형 현수막처럼 주민 직접적인 수익 고려와 꾸준히 확충해온 체험형 관광시설도 한몫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수만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얼음낚시터의 안전 문제에 대한 누적된 신뢰가 큰 토대가 됐습니다. 겨울 축제장의 안전 품질은 비단빙상 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석 먹거리와 직결된 위생 안전과 응급 안전, 교통 안전 그리고 안전관리자 요인까지 안전 품질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 품질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의사를 결정짓는 요소이자 내년 축제의 성공과 연계됩니다.

지역 축제는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그 지역 경쟁력을 높입니다. 착실하게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온 화천산천어축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생명 윤리적 측면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는 29일 축제 폐막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지역주민과 군의 노고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보완점을 더 많이 도출해내는 알찬 기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1월 25일 (수)
사설/칼럼 21면

강원도를 전지훈련 거점으로

-경기 활성화 입증, 시설·조례 등 여건 조성 필요

시군마다 전지훈련 기반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유치는 물론, 훈련장 확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환경조성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전지훈련의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는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깨끗한 공기로 이전부터 훈련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입지적 요인도 장점입니다. 도와 지자체는 강원도를 국내 대표 전지훈련 거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구군은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경제활성화를 이룬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1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8개 종목 108개 대회를 유치 24만9860명이 방문해 17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으며, 10개 종목 77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해 1만7779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200억원을 상회한 뒤 코로나19상황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엔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경기 외적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은 양구 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강릉을 찾은 전지훈련 팀들은 축구와 야구, 태권도, 육상 등 10개 종목 83개 팀 2000여명에 이르러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복합체육공원 등 체육 시설이 크게 개선된 이후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찾는 선수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개 종목 77개 팀 737명(연인원 1만2046명) 규모의 팀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올해부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인제군도 전지훈련 복합단지를 바탕으로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전지훈련을 연중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선 선수단과 구단 등과 MOU(양해각서)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천군의 경우처럼 전지훈련단 유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치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선수와 가족들이 장기간 숙식을 하는 전지훈련의 경기 효과를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1월 25일 (수)

오피니언 18면

특별한 강원도의 길, 교육

The 초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규제 풀어 대학도시 육성
지역교육 혁신 성공하면
인구·기업 유치도 저절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첫걸음을 뗐다. 특별 자치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도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의 행복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7대 요소가 있다. 하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다. 둘, 보육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셋, 건강해야 한다. 넷, 편안하고 좋은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 다섯, 노후 걱정이 적어야 한다. 여섯,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당연히 교육이다. ‘교육 특별자치도’가 우리의 출발점이자 목표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성공한다. 지식과 기술은 교육에서 나온다. 좋은 모델이 있다. 네덜란드 바헤닝언은 인구 3만8,000의 작은 도시다. 명문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연 매출 80조원의 세계적인 식품 클러스터가 됐다. 2,600여 개 식품 기업과 20여개 연구기관이 모여 강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특히 강원도에선 희망의 불꽃이 사라져 간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

해도 취직이 어려워 절망한다. 도내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대학 도시’에 길이 있다. 대학 내에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 용지는 값이 저렴하다. 캠퍼스 내 건물 용적률, 고도 제한 등을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 국립대가 가진 토지를 이용하자. 땅을 매각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강원대의 경우 홍천 연습림 956만 평을 갖고 있고, 영동 바닷가에도 땅이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을 특화하면 지원해줘야 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성학과로 인재를 키워내자. 도내 4개 국립대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연세대, 한림대 등 사립대의 과감한 도전도 지원하자. 문 닫은 대학을 ‘은퇴자 마을’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둘째, 초·중·고교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군 지역의 인구는 강릉·춘천·원주로 빠져나가고, 세 도시에선 다시 중3부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재정의 불교를 교육 부문으로 끌어와야 할 때다. 길 닦는 데만 돈 쓸 때가 아니다.

인재를 키우지 못하면 강원도의 미래는 없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한다. 디지털 선도국가 에스토니아의 역대 대통령 두 분에게 성공 비결을 질문했다. 그들은 “수학, 컴퓨터, 2개 이상의 외국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독서와 체육, 토론 교육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교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최우선이다. 우수한 선생님이 핵심이다.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교사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역량을 갖춘 교사가 도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춘천기계공고, 원주공고 등 마이스터고의 특화 전략도 세우자. 경기 안산의 디지털미디어고를 배울 필요가 있다.

셋째, 유보 통합과 교육·보육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지능의 80%가 8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학설이 있다. 맘카페와도 머리를 맞대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확신한다. 교육에 성공하면 인구 유입도, 기업 유치도 저절로 될 것이다. 강원 특별자치도 입법으로 강원도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았다. ‘원대한 기회의 땅’ 강원도를 만드는 길, 교육 혁신에서 시작하자.

江原日報

2023년 01월 25일 (수)

사설/칼럼 19면

정치권, 경제 시름 ‘설 민심’ 가슴으로 귀 기울여야

설 연휴가 끝났다. 여야 정치인들은 귀향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전국의 민심을 점검하고 향후 정국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번 설 명절의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다. 여전히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등으로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설 연휴 민심을 요약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바다.

국민은 2023년 새해에 희망을 엿보지만 기업들은 생존을 얘기하고 있다. 내부 분위기 제고용이나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472억 달러였다. 우리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2배가 넘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3분기

까지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익률은 -7.2%로 전년도 동기(53.5%)보다 대폭 하락했고 대기업 가동률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때보다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올 1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2년 만에 최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빅3’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진감래’가 아닌 ‘첩첩산중’이다. 이번 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데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받지 않아 정치권은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설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여야가 유달리 부산하게 움직인 배경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걱정을 덜어줘야 할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국민에게 우려와 짜증만 안겨주고 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당내 의원들끼리 전당 대회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이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에 맞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촉구 등 정치권의 전쟁터가 됐다. 이러니 민심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 여야 의원들이 확인한 것처럼 정치권의

치솟는 물가 등으로 국민 마음 불편
대기업 가동률, 반등의 기미 안 보여
여야, ‘민생 살리기’ 대책 마련할 때

‘민생 실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권에 민생 챙기기와 협치를 주문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락에 함몰돼 민생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의원들의 자질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한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질타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국민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으면 힘겨운 현실을 그나마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정치가 희망마저 살려 내지 못하면 고통을 참기가 어렵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골고루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정치인들은 이번 설 민심에 대해 응답할 책무가 있다.